

##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 정책토론회

### 경기북부 시·군, 미군 반환기지 개발 거부 결의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과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여 향후 경기도의 정책 방향 및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법개정 대표발의자인 정성호 국회의원, 경기도 주한미군공여구역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박윤국 포천시)장,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연합회(공동회장 김용선 북부상의회장, 김준택 동부상의회장, 김인만 포천상의회장, 정병권 고양상의회장, 정장현 의정부상의회장, 김준택 동부상의회장, 김인만 포천상의회장, 정병권 고양상의회장, 정장현 의정부상의회장) 공동주관으로 의정부, 과주, 동두천, 양주, 남양주, 포천,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 8개 시군과 하남, 화성 등 남부지역 2개 시군의 주민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이 결의하였으며 향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날 한배수 경기도 특별대책 지역과장은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처리하고 떠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관심과 지원이 미진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편袒까지 이전 재원을 위해 조기 매각하고자 하는 반환미군기지에 대해 서둘러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개선방향으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 군사기지 관련 국민 피해의 사전예방과 사후보상 철저,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 대책을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의, 반환 미군기지의 무상 양여,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일자리 창출에의 조세 감면 및 재정 지원, 국무총리실 직속의 전담행정기구 설치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는 “참여정부의 수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도권지체, 생산효율성 저하, 외자유치 좌절 및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미군반환공여구역 시장군수들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반환구역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과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경쟁력 저하, 무등록 공장 양산 등의 많은 문제점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 폐회에 앞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김용선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주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별도배정 및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지역분류별 지원에서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

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 하였던 경기북부지역 주민 1,000여명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집회를 갖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의 전향적 수용,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역분류제 원점 재검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성호 국회의원,

박윤국 포천시장 등 대표단은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는 행정성 없는 정책을 성토했 후, 법사위원회 위원장,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법개정 및 2단계 균형정책 후속조치반대결의문과 서명부(경기북부지역 기업인 5,000명) 등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수원 기자 forme65@paran.com

## 포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불만

### 11일 반월아트홀 1천여명 참가 쫓기대회 개최

포천시의회와 포천상공회의소, 시민들은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지역분류와 관련해 강행본을 제기하면서 조직적인 대응조치를 보이고 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포천시의회와 포천상공회의소 및 기관단체, 주민들은 11일 오전 11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 대강당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쫓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8일 이들 기관단체에 의하면

정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각종 지표를 감안해 낙후지역과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조세와 재정 등을 차등부과 또는 지원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법률에서 포천시 관내 14개 읍·면·동 중 7개면이 낙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포천시가 단지 수도권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만으로 정체지역에서 성

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로써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 감소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 등 포천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1등급 상향조정을 무조건 폐지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 기관단체들은 쫓기대회 결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이번 지역분류 시안은 정경지역에 접한 포천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정부

가 채택한 정책수단인 지역분류제도, 조세감감제도의 후속조치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역분류 시안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결의문에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60년 동안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방보다 더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과 정부가 정책적 고려라는 미명하에 경기도 지역을 1등급 더 불이익을 주는 이번 지역분류 시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편타당한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를 전면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쫓기대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수립부터 최근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및 그 후속조치발표까지 내용이

경과보고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사인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이다.

미리 준비한 경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 시작과 함께 200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에 2003년10월 경기도 차원의 ‘수도권 역차별 철폐를 위한 1천만 경기도민의 주장’ 결의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도의 요구는 무시된 채 2003년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8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 및 공공부문 지방이전을 통한 분산정책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되어 시행됐다.

이수원 기자 forme65@paran.com

##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④ 포천시 첨단항공 테마파크 조성

### 외자유치 통한 2015년까지 3단계로 추진

#### 사업자 비용 전담 운영은 전문기업 위탁

포천시는 2015년까지 1천억원을 들여 단계별로 항공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항공인프라 사업유치 제안 용역설명회를 가졌다.

포천시는 사업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경기도 협의회와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을 거쳐 외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항공테마파크 사업은 (주)김스솔루션이 제안한 사업으로 (사)한국항공정책연구소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용역보고회에서 1단계(2007년~2009년) 헬기 정비시설 설치, 2단계(2008년~2012년) 중형항공기 제조공장 설치, 3단계(2008년~2015년) 항공테마파크 조성을 논의했다.

(주)김스솔루션 측이 제안한 1단계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산면 마산리 일원 66,000㎡(20,000평)에 120억원을 들여 항공기 정비시설과 연구실, 교육장, 격납고, 사무실 등을 갖춘 헬기정비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사업 부지를 기존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66,000㎡를 15항공산업부지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2단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산면 마산리 일원 1,700,000㎡(514,000평) 규모에 1천억원을 들여 터보프롭 중형여객기(L-410, 610) 생산시설을 갖춘 중형항공기 제조 플랜트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기에는 사업후보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지정과 포천시에서 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3단계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영북면 군부대 비행장 주변 4,000,000㎡(121만평)에 항공테마파크 시설과 항공역사박물관, 우주시물레이션, 대학, 항공연구소, 항공부품 연구센터, 항공우주 게임랜드, 호텔, 쇼핑몰 등을 갖춘 첨단항공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항공테마파크는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전담 개발하고 시설운영은 전문기업에 위탁해 운영할 방침이다.

포천시와 한서대학교는 지역 공학관 한서대학교의 항공 관련 학과 일부를 포천시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군비행장 및 비행공역 사용 허가 ▶지역공학관 및 항공유치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실습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행정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포천시와 한서대학교는 포천지역 항공사 설립을 위해 항공법,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령과 규칙, 규정, 지침 등의 범위 안에서 양측이 적극 협력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협력단’도 구성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포천시와 한서대학교는 2006년12월8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지역공학관 및 항공관련학과 실습시설 유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 부시장과 한서대학교 항공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협력단을 구성했다.

이 당시 양측은 ‘공동협력단 운영규정’을 제정해 협력단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분기별 및 수시로 협력회의를 개최해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박 시장은 올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오부이프시와 우호교류 MOU를 체결했다. 또한 유엔코 대통령을 예방하고 자포르지(Zaporzhy)시 소재 모터시크(Motor Shch)사의 중형 카모프 헬기 엔진 정비 및 여객기 엔진 정비공장 설치를 위한 기술체류 및 장비 등의 판매를 요청한 바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한서대와 군부대 비행장을 활용한 지역공학관 설립을 추진하고 체코와 우크라이나 등 해외 항공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면서 “헬기 정비공장과 중형 여객기 부품공장 설립 등 해외 항공산업 유치와 연계해 항공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수원 기자 forme65@paran.com

##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앞서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뉴타운조성**  
1,10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질서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광역교통망의 구축과 대중교통시스템의 개선으로 편리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 및 개발**  
무분별한 개발과 허술한 관리로 오염되어가는 경기도를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명품 경기도가 되겠습니다.